

달러 주도 세계 경제가 韓 위협... “체질 개선 기회로”

달러의 힘, 新통화전쟁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교훈 (끝)

일본보다 산업경쟁력 지수 낮아
자산가격폭락→경기위축 악순환
한계 중산층 추가 붕괴 등 염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고한 달러화 제국에 약간의 균열이 생겼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 달러가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인 이른바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달러에 의한 경제 질서)’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선 힘의 논리(달러 약세 유도)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 처럼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달러 값이 오르면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하고, 달러 값이 떨어지면 수출기업들이 걱정이기 때문이다.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교훈

통화전쟁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근간한다. 그는 중국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외환시장 개입, 자국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노동·환경 기준 등이 미국 경제(특히 제조업)



달러가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인 이른바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달러에 의한 경제 질서)’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를 쪼먹고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의 경우 달러약세는 치명적이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는 ‘플라자 합의’(1985년) 33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미국 일본 등 G5(주요 5개국)는 달러화 강세를 바로 잡기로 합의한다. 플라자 합의의 직접적인 배경은 달러 강세에 따른 미국의 무역적자 급증이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강세, 달러화

약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엔화 가치는 달러당 240엔에서 1년 만에 150엔까지 치솟았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후유증으로 ‘엔고 불황’과 ‘버블(거품)경제 붕괴’ 등 구조 변화를 겪게 된다. 급속한 엔화 강세로 자동차, 전기 등 수출대국 일본을 떠받쳐온 제조업의 해외이전도 가속화했다. 당시 일본 재무부장관이었던 다케시타 노보루가 플라자 합의가 ‘잃어버린 20년’이란 악몽으로 이어질 줄 알았다면 생각을 달리 했을 것이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 고성장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노믹스와 글로벌 통화전쟁발 ‘환율’ 압박은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산업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수출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한국의 산업경쟁력 지수는 16위에서 13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속련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비중으로 분석한 산업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이 20위권에 머무는 동안 중국은 같은 기간 산업경쟁력이 20위에서 3위로 치솟았다. 일본은 20년 전보다 두 계단 떨어졌지만 세계 5위를 지켰다. 특히 한국은 산업응집력 지수에서 20년간 21위에서 25위로 오히려 밀려났다.

최악 시나리오는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염려된다.

◆ 체질 개선 기회로

문제는 선뜻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수도 없는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 정부가 쓸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도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1996년~1997년 사이에 외환당국은 외화부채의 원화가치를 낮추기 위해 비싸게 사들인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이는 결국 97년 11월 외환위기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명박 정부때도 한차례 환율 폭풍에 홍역을 치렀다.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낙수효과’를 이유로 시장에 개입한 것.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때 내 걸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일반 서민들은 물가 상승과 대기업 중심의 부의 편중, 확대되는 소득격차로 인해 오히려 심한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중소기업 또한 키코 사태로 인해 많은 도산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넉놓고 있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주문한다.

윤만호 전 산은금융투자 사장(EY한영 상임고문)은 “태슬라, 제너럴 일렉트릭(GE) 등 글로벌 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R&D), 설계 등의 영역에 치중하는 반면, 한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 생산 등의 영역에 치중해 있다”며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기업들이 사업재편 가속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력 확보, 이종산업 간 생태계 구축, 디지털 혁신 등을 주문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특화은행 연내 문 열 것... ‘혁신도전자’ 나와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대학생·청년창업가 등과 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혁신도전자’가 출현하도록 진입 문턱을 과감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대학생과 청년 창업가 등과 가진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도전자들이 금융업 테두리 안으로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우선 금융 당국은 진입 장벽을 낮춘 특화금융사 설립을 추진한다.

금융 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정조 임금이 시전상인이 독점하던 상업 활동을 다른 상인에게도 허용한 조치인 신해통공에 빗대어 금융산업의 무술통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연한 바 있다.

은행은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 보험은 소액 단기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소규모 보험판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온라인 전문보험사의 자본금요건을 완화하고 그간 신규진입이 부진했던 생명, 연금, 상해 등에 대해서도 특화보험사를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2분의 1 이하로 완화, 가령 증권에 대한 중개업 자본금요건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춘다.

자문·일임업은 등록 단위를 통합·간소화한다. 신탁업은 인가단위를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

를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반절 이하로 내린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또 적극적인 진입이 가능하도록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진입정책 결정이 담당자 재량에 의해 보수적, 칸막이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의 시각이 있었다”며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경쟁이 부족한 영역엔 적극적으로 신규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낮아진 진입 문턱을 넘는 과정도 투명하게 하겠다”며 “현재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공정위, 대기업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자구노력’ 인정

현대차·SK 등 10곳 ‘바람직’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계에서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편 사례를 분석·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자구노력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분석을 토대로 기업 측의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분석 및 평가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제계와의 간담회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 지배구조 개편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지난해 6월 23일 4대 그룹 전문 경영인



공정거래위원회

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2일 진행된 5대 그룹과의 2차 간담회에서는 일부 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자발적 개선에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그룹 정책 간담회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소유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0개 대기업집단으로 파악됐다.

5대 그룹 중에서는 삼성을 제외한 현대차, SK, LG, 롯데 등 4개 집단이 구조 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6대 이하 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 태광 등 6개 집단이 구조 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공정위는 각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소유 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지배 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소유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은 올해 중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롯데와 효성은 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LG, SK, CJ, LS는 기존 지주회사 전환 집단으로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내부거래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림, 태광이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리할 계획이다.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SK는 SKI노베이션과 (주)SK에 각각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전자투표제란 주주가 주주총회 출석 대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비즈(2018년), 현대차·기아차(2019년), 모비스(2019년)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최근 발표하거나 추진 중인 구조 개편 사례들은 소유지배 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발표한 구조 개편 방안들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차질없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다른 대기업집단으로도 적극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집단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반기별로 분석·평가하여 이번처럼 공개할 예정이며,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